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인쇄/1998년 12월 26일

발행/1998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국제관계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63-X

3,000원

연구보고서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 춘 흠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중·대만의 통일전략을 고찰하고 1987년 이후 증가되고 있는 중·대만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실태를 시기별로 구분, 분석하여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중·대만의 통일전략

통일전략과 관련,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된 중국의 비전과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통일방안을 '일국양제'(一國兩制), '3통4류'(三通四流) 방식, 평화통일 등을 표방하고 있는 반면에 대만은 '일국양구'(一國兩區), 3단계 방식, 평화통일 등을 표방하고 있어 많은 갈등요인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만간의 통일방안의 차이점이 양안간 비정치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중국이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에 있어 대만보다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경협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추진하나, 대만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협상은 반대하고 이를 대만이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문은 다음에 합의함으로써 실리를 취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대만의 정책보다는 큰 신축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중국의 신축성은 대만기업의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를 크게 인정하고, 정치적 불일치로 인한 양안간의 비정치 분야의 협력증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노력한데 기인한다. 특히 중국은 1997년 대만해협상에서의 대대만 무력시위이후 대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유화 정책을 취하여 실리적인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대만은 중국과의 직교역을 불허하면서도 제3국을 통한 중국과의 간접교역을 수용하고 특히 홍콩을 경유한 무역을 적극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이 상호 공통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양국이 자원, 상품, 기술에 있어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2. 중·대만 비정치분야 시기별 교류·협력 실태

제1기인 1987년~1992년 양안의 적대적 정치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양안간 교류·협력을 위한 중국의 정부조직이 먼저 신설되고 대만 역시 중국과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였다. 특히 1987년 11월 대만의 대중군사계엄령 해제로 인한 대만인들의 중국방문 허용은 양안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또한 1987년 대만의 대중국 투자기술 합작허용 조치 역시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로 인해 대만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조치로서 대중 투자이익만 보장된다면 양안의 정치관계 개선속도와는 별개로 대중 투자규제를 풀 수 있는 입장으로 인해 양안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더욱 증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비공개 학술접촉은 대만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으며 1987년부터는 학술, 교육 및 친척방문 교류가 중·대만간 사회·문화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분야의 교류가 점차적으로 빈번해짐에 따라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1987년에서 약 6~7년간 대만인의 방중(친척방문 및 관광 포함) 수는 약 730만명에 달하였으며 1988년에서 1994년간 중국인의 대만 방문자수는 5만명이상이었으며 그 중 7000명 정도가 교환 목적이었다.

제2기인 1993년부터 중국과 대만은 불법 입국, 중국 민간항공기 납치범 송환과 어로분규 등에 관한 문제해결을 논의함으로써 양안간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협상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정치적 변수로 인해 경제협력을 포함한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이 단기간 감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아울러 양안간의 정치적 관계가 긴장상태에서 완화상태로 진입하였음에도 중대만의 통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양안관계의 소원이 장기화될 경우, 대만기업의 막대한 손실 초래 및 대중 경제력 의존을 우려한 대만당국이 자국기업의 대중 투자규모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양안간 문학과 예술 교류가 전체 사회·문화 교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문학과 예술교환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방문자수의 2분의 1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교육, 체육, 사회과학, 영화, 과학기술, 텔레비전, 건강관련 교류의 점진적인 증진으로 언론, 출판, 종교, 관광, 민속신앙, 금융, 세제, 항공, 핵에너지, 법률 분야의 교류도 증가되었다. 1994년 초 대만은 대만 공무원의 방중과 중국 공무원의 대만방문에 대한 규정 제한을 완화하여 1997년까지 대만인 일천만명이, 중국인 22만명이 상호 방문할 정도로 인적왕래가 증폭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규모와 금액의 확대를 위해 대만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만기업의 대중 경

제이의 추구를 부추키는 「이민뽀관」(以民逼官) 전술을 구사하였다. 중국은 특히 대만상업계, 항공, 선박업계 등을 겨냥, 이들 업체들의 본토투자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해협항운관리법」(海峽航運管理法)을 공포함으로써 대만당국의 저지 노력을 견제하였다. 반면 대만은 정부주도로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액의 상한선과 업체별 투자한도를 정하는 등 대만기업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중국의 압력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양안교역과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실현은 중국 또는 대만의 일방적인 정책완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대만기업의 교류와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또는 대만의 일방적인 완화조치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여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인들과 양안의 당국자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양안간의 경협추진은 정부간 협상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조치가 상대방의 호혜적인 반응과 조치를 유발하는 형태로 정착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심화된 데에는 정부간 협상 보다는 민간베이스 혹은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대해 비정치적 교환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중국은 중국경제 증진을 위해 대만정부가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체라는 점을 인정,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만이 교환과 협상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킨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즉 중국과 대만은 공히 교환은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협상은 양안간 비정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인식한 것이다.

3. 중·대만 사례가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중·대만 경제 교류·협력 사례는 북한에 비해 통일방안과 경제력에서 이니셔티브 쥐고 있는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호혜적인 대북 경제 교류 협력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우선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을 기업 자율에 일임함으로써 대북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의 분위기를 활성화한 다음 점진적으로 한국기업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면 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의지의 적극적 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당국의 입장이 크게 개방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정부간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북한 당국간 공식협상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가칭 ‘민간 교류협력 위원회’를 우선 설치하여 북한당국의 조치를 유도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류하면서 협상한다는 기본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만이 중국과의 직교역 불허라는 자국의 공식 입장을 우회할 수 있었던 중개지로서 홍콩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홍콩과의 교역이 없이는 양안간의 교역과 투자규모는 크게 확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홍콩, 마카오 지역 화교들이 중·대만간 교역과 투자 협력 등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양안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홍콩만큼 경제교류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보, 자본, 인적 네트워크, 금융기지, 시장경제와 경영기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개지도 없다. 남북한관계에서 홍콩과 유사한 중개지의 부재는 이질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경제적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함을 의미한다. 자칫하면 남

북한간의 경제마찰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경제활동이 억제될 수 있는 소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유입과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가능토록한 북한의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의지와 속도는 중국에 비해 너무나 떨어져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동기를 매우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대만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미 10여년 이상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나, 남북한은 이제 겨우 경제교류를 시작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 우선 비정치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육, 경험, 교육, 관광, 친척방문 등 종류에 따라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관계가 마비되더라도 민간차원의 교류가 지속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최악의 상태, 즉 전면 중단사태가 초래되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관계가 소원하게 되면 될수록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교류와 협력은 실무차원의 협상으로 상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감안, 한국은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등 여러 방면의 교류에 있어 북한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비록 남북한 정치관계가 소원해 지거나 냉각된 상황에서도 비정치분야의 교류를 지속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 학자나 학생간의 학술교류, 남북한 예술가와 예술단의 상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상호 이견의 폭을 좁혀나감으로써 이해의 증진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
II. 중·대만의 통일전략	2
1. 중국의 통일전략	2
가.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원칙	2
나. 「3통4류」(3通4流) 방식의 교류·협력	3
다. 평화통일 실현	4
2. 대만의 통일전략	5
가. 「일국양구」(一國兩區) 통일 원칙	5
나. 「3단계」 통일 접근	6
다. 평화통일 실현	7
III. 중·대만 비정치분야 시기별 교류·협력 실태	9
1. 1987년~1992년	9
가. 정치관계	9
나. 경제 교류·협력 분야	10
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야	13
2. 1993년 이후	17
가. 정치관계	17
나. 경제 교류·협력 분야	24
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야	33

IV. 결론 : 중·대만 사례가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37
1. 중·대만 교류·협력의 특징	37
가. 중국의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과 대만의 「실리위주」(實利爲主) 전략	37
나. 중국의 「이민편관」(以民逼官)과 대만의 「이관편민」(以官逼民) 전술	38
다. 중·대만의 일방적 정책완화 조치	38
2.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40
가. 경제 교류·협력 분야	40
나.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야	42
참고문헌	44

I. 서론

1949년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래로 1970년대 말까지 대만에 대해 적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중·대만간의 정치교류는 물론 및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사례도 전무하였다. 그러나,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전후로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을 표방하고 1979년 1월 대만과 비정치 분야, 즉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등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한 양안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만 정부는 근 10년간 중국과의 교류를 비공식적으로 수용하다가 1987년부터 중국과의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양안간의 교류는 점차 증대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대만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중·대만의 통일전략을 검토한 다음 양안의 정치관계와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시기(1987~1992년, 1993~현재까지로 구분) 및 분야(경제, 사회·문화 등)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테마는 다음과 같다.

(1) 중·대만의 통일전략은 무엇이며 양안간 교류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2) 양안의 시기별 정치관계와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대만간 연도별 주요 비정치 분야(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건수 등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고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대만의 통일전략

중국과 대만은 공히 민족주의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일된 중국의 비전과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아래 중국 자신이 쏠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권국가임을 표방하고 대만을 자국에 종속된 성급으로 격하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화하는 대외전략을 실행하여 왔다. 반면에 대만은 다변화된 중국이라는 입장에서 중국과 대만이 각각 대등한 주권국가임을 표방하고 중국의 대대만 주권 및 무력행사 포기를 유도하는 실질외교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중·대만의 입장은 통일전략에서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바, 양안의 비정치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온 양안의 통일전략을 우선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통일전략

가. 「一國兩制」 통일 원칙

중국은 자국이 유엔가입국으로서 전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성을 지니기 때문에 대만은 다만 고도의 행정 자치권만을 행사하는 특별행정구의 위상만을 부여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981년 9월 30일 엽검영(葉劍英)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대만당국과의 협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대만의 조국복귀와 평화통일에 관한 구조 방침」, 소위 「엽구조」(葉九條)를 발표하였는 바, 이 방침은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원칙만이 유일한 원칙이며 평화통일 실

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대만인의 서신교환, 이산가족 재회 및 '4류'를 위한 회담개최와 대만인의 대륙이주 허용 및 자유왕래 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대외적으로 대만정부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정부와 정부차원의 회담보다는 다만 당 대당 차원의 회담이나 협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¹⁾ 이러한 중국의 원칙은 1997년에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1997년 7월 홍콩의 중국귀속이후 홍콩은 「일국양제」의 원칙아래 홍콩주민의 강도 높은 자치권에 의해 국방과 외교사안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걸쳐 행정되어 질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이 홍콩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이 대만문제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만독립이나 대만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²⁾

나. 「3통4류」 방식의 교류협력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교류와 협력, 즉 비정치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처음부터 판단하였다. 1979년 1월 1일 중국은 대미 외교관계 수립시에 대만에 대해 「3통4류」(通商, 通航, 通郵와 經濟, 文化, 體育, 科學技術)를 제의하고 「3통4류」 방식에 바탕을 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표방하였다.³⁾ 중국이 「3통4류」 방식을 채택한 것은 무엇보다 대만기업들의 중국 경제개방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였

-
- 1) "Article Reviews Cross-Strait Exchanges," *FBIS-CHI-95-117*, 9 Jun 1995 ; 「人民日報」, 1995. 6. 9.
 - 2) "CHINA: Shen Guofang Discusses PRC Diplomacy in 1996, 1997," *FBIS-CHI-96-252*, 29 Dec 1996 ; 「文匯報」, 1996. 12. 29.
 - 3) *FBIS-CHI-95-117*, 9 Jun 1995 ; 「人民日報」, 1995. 6. 9.

기 때문이며 중국의 「통일전선」 차원에서 대만기업인들과의 경제 협력이 증대되면 될수록 대만내부에서의 ‘대만독립’이라는 정치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1990년 5월 대만은 중국의 「3통4류」 실현의 전제조건을 중국측에 제시하면서 대만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대만은 비정치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가능할 것임을 표방하였다. 대만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에서 대만의 국제적 역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들이다.

다. 평화통일 실현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실현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만의 거듭되는 요구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대만의 독립주장과 선언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만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1996년 3월 중국의 대만해협 상에서의 격렬한 무력시위는 대만이 독립을 표방할 경우 미국이 이에 동조하여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도 미국과도 정면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염두에 둔 무력시위이었다. 이처럼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대만간 통일 실현은 원칙적으로는 평화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만의 독립선언과 미국의 대만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대만과의 전쟁상태 돌입이 결정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무력통일을 실현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말 장진(張震) 중국군사위 부주석은 중·대만이 전쟁상태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가상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 것 중 대만의 독립성 확보에 가장 민감한 대응을 하였다. 즉 대만당국이 대만독립을 선포하거나, 대만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획책아래 유엔에 주권국가로

가입하거나, 또는 외국군대가 대만당국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경우, 대만의 국내상황이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여 대만내부가 대단히 불안정할 경우, 또는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외국이 대만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⁴⁾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사용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실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2. 대만의 통일전략

가. 「一國兩區」 통일 원칙

대만은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과는 달리 「일국양구」(一國兩區) 통일원칙을 주장하여왔다. 대만정부는 우선 중국과 대만이 대내외적으로 독립적 주권을 행사하는 두개의 정부로 상호 인정하고, 향후 중·대만 양안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의 수립을 통해 통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1996년 이등휘 대만 총통 취임사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3통 제안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중국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대만은 우선 중국이 삼민주의를 존중하고 대만을 지방정부로 간주하지 말며 무력통일을 포기하고 이성(reason), 평화(peace), 평등(equality), 상호주의(reciprocity)를 실천할 것을 선언하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3통 실현을 통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

4) China: "Jiang Zemin Speech on Taiwan Strategy Revealed," *FBIS-CHI-97-009*; Yueh Shan, "Jiang Zemin Concedes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aiwan -- Also Pledges To Resolve Reunification Issue by 2010," *Cheng Ming*(Hong Kong), 1 Dec 96 No. 230, pp 19-20; 중국의 대만독립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은 "PRC: 'Four Complexes' in Cross-Strait Relations," *FBIS-CHI-96-079*, 20 Apr 1996. 참조

을 고수하여 왔기 때문이었다.⁵⁾ 이러한 대만의 통일원칙은 중국의 원칙과 정면 배치되고 있어 양안간의 정치적 갈등을 지속케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만의 입장을 융통성있게 조정해 왔다. 연전 부총통은 1998년 3월 대만은 양안관계를 '3불'(Three Nos, 대만독립 선언 불원, 현상태에서의 통일실현 불원, 대중 적대주의 지속 불원)과 '3찬'(Three Yeses) - 평화(Peace), 교류(Exchange), 상호 승리 정세(Yes Win-win Situation) - 관점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양안간의 평화속에서 상호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다.⁶⁾

나. 「3단계」 통일 접근

대만은 또한 통일실현을 위해서 민간교류 → 정부간 접촉 → 통일 협상이라는 「3단계」 접근론을 주창하고 통일은 정부간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방하여 정부간 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대

5) "PRC: Taiwan's Attitude Toward '3 Links' Viewed," *FBIS-CHI-96-127*, 23 May 1996; 「文匯報」, 1996. 5. 23; 대만의 [국가통일 계획]에 의하면, 대만의 평화통일 실현이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the ROC proposes that cross-Straits relations should be handl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eason, peace, equality, and reciprocity. The principle of reason should be a basic way of thinking for handling cross-Straits affairs. For a divided country, the principles of peace, equality, and reciprocity are the best expression of reason.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as effected according to the rational principles of equal treatment, reciprocal contacts,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Community from a single integrated market to a greater European community was also based on rational considerations..." "White Paper on Cross-Straits Relations," *FBIS-CHI-94-132*, 6 Jul 1994, 중국어 원문은 「中國新報」, (臺北) 1994. 7. 6 참조.

6) 「聯合報」(대만), 1998. 3. 1. 連戰 대만 부총통과의 인터뷰; "Taiwan: Lien Chan on Cross-Straits Relations," *FBIS-CHI-98-060*, 1 Mar 1998.

화와 협상을 촉구하여 왔다.

이처럼 대만이 3단계 통일 접근을 주장하는 것은 자국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로 중국의 대외개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 할수록 중국의 대만정부에 대한 전략과 입장이 보다 유연해져서 통일실현을 보다 평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만당국은 중국민주화 희망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무분별한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날로 신장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대만경제의 의존이 심화될 경우, 대만기업이 정치적으로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⁷⁾

다. 평화통일 실현

대만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통일 실현은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어 중국의 공식적인 대대만 무력사용 포기의 선언이 없는 한 중국과는 의미있는 통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통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심화 되면 될수록, 자국주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정치 구도가 보다 민주화되어, 북경당국의 대만통일을 위한 무력사용 의지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정부당국자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대만은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추구하고 있으나, 비정

7) "Taiwan: Lien Chan on Cross-Strait Relations," *FBIS-CHI-98-060*, 1 Mar 1998; 「聯合報」, 1998. 2. 28. 連戰 臺灣 行政院長과의 인터뷰 내용.

8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치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또한 중국이 무력통일을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실현에 있어 대만보다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중·대만 비정치분야 시기별 교류·협력 실태

1. 1987년-1992년

가. 정치관계

1987년말까지 중·대만간 정치관계는 냉각되어 왔다. 이는 1979년 미·중수교시 공표된 수교공동선언을 통하여 미국은 중국을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함으로써 양안간 문제에 있어 미국의 개입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 데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기존의 '해방대만'이라는 구호를 버리고 '화평통일'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등 평화공세를 가하기 시작하여 대만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감과 더불어 대륙으로부터의 안보 위협감은 날로 고조되어 왔다. 대만은 「3불정책」(三不政策: 不接觸, 不談判, 不妥協)을 내세워 중국과의 정치 및 경제교류 관계를 두절시키는 한편, 양안간 사회·문화 교류 등에 대해 선별적인 적용으로 양안간 교류는 서서히 전개되어 왔다.

1987년 11월 2일 장경국(張經國) 대만 전총통은 대중 군사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대만인들의 중국방문을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동안 적대적으로 대치되어 있던 양안간 정치관계가 해빙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뒤이어 1988년 이등휘(李登輝) 대만 총통 취임을 계기로 기존의 반공적인 입장이 지양되고, 새로운 차원의 양안관계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11월 이총통의 탄성외교(彈性外交) 제창으로 대만은 공산국가와의 교류 불허 방침에서 중국이 교류하고 있던 여러 공산국가들과

의 교류·협력 수용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대만이 공산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증개로 중국과 교류·협력 할 수 있음을 표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4월 30일 대만은 중국을 반란단체로 규정하는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 종식의 선언으로 중국의 중국본토에 대한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향후 본토탈환을 위한 군사동원령이 없을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협력이 법적 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양안의 적대적 정치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양안간 교류·협력을 위한 중국의 정부조직이 먼저 신설되고 대만 역시 중국과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였다. 중국은 1988년 외교부 산하에 「대만사무판공실」(臺灣事務辦公室)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에 「대만관계사」(臺灣關係司)를 신설하였으며 하부구조로는 각 성과 시에 「대만판공실」(臺灣辦公室)를 설립하였다. 이어 1991년 말에는 재단법인 형태(실질적으로는 반관반민)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海協會, the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ARATS)를 신설,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창구로 활용하여 왔다.

중국의 조치에 대해 대만은 1991년 1월 총통부 직속에 「국가통일위원회」(國家統一委員會)를, 행정부 산하에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 Mainland Affairs Council, MAC)를 신설하였으며 1991년 2월 중국의 해협회와 성격이 유사한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海基會, the Straits Exchange Foundation, SEF)를 창설, 중국의 ARATS와의 대화 협상 창구로 활용 양안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 논의에 적극 임하기 시작하였다.

나. 경제 교류·협력 분야

중국은 1979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을 전개하면서 1987년 이전까지 대만에 대해서도 경제교류 및 협력의 시급함을 인식, 양안간의 통일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관련 법적 조치 및 기구를 일방적으로 표명 또는 설치하여 왔다. 중국은 1978년 복건성의 하문(廈門)을 대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1980년에는 대만과의 교역이 국내무역으로 간주될 것임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1983년 4월 중국은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3개항의 우대 조치 즉 조세완화, 토지사용료 감액 및 투자분의 30%이상 중국내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은 1984년 홍콩, 마카오를 경유한 중국 상품의 수입제한을 완화하여 중국과의 무역을 중개무역으로 용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조치는 1986년까지 지속됨으로써 중국의 대만기업의 대중투자 유치정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이 기간의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다만 상징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대만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에 적극 임하는 많은 중국의 규정이 1987년에 발표되었는 바, 「대만동포의 본토방문에 관한 통지」와 「대만동포투자장려규정」(臺灣同胞投資獎勵規定)으로 대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와 1987년 1월 1일의 대만정부의 대만인의 대륙방문 허용과 외환통제의 자유화 실시로 1987년 이후 양안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대만기업의 지방세 및 토지사용료의 감면, 대만기업 투자특구 설치 등으로 대만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기업이 대중 투자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다.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보

호를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臺灣同胞投資保護法實施細則)이 입법화되었다.⁸⁾ 이 세칙에는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형식, 재투자 형식, 대만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대만기업의 경영관리 자주권, 분쟁시 중재협상, 대만기업의 양도와 이전, 권한승계 등에 관한 법세칙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한편, 대만은 대중 직접 교역, 투자 및 통행 자체를 금지하여 왔기 때문에 대중 경제교류에 대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았으나, 1988년에 이르러 중국의 주요 농산 및 공업용 원자재의 간접 수입 등을 인정하였다. 1987년 말에 허용된 대만주민의 중국여행 및 친지방문 등의 조치로 양안 주민들의 접촉이 제3국을 통해 활발히 실현되어 대중 경제교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만이 직접거래, 직접교역, 직접통행을 통한 직거래 자체를 불허하고 다만 제3국을 통한 중국과의 거래만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제3국 중 홍콩이 가장 중요한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등의 중개지로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어 1989년 대만정부는 중국과의 전화 서비스, 전신통화 및 우편물 수속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1979년 중국이 요구한 3통4류를 간접적인 형태로 전부 수용한 획기적인 대만의 조치인 것이었다. 1990년 10월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중국과의 투자, 기술협력 등의 부문도 허용하는 「대륙투자기술협력관리법」(大陸投資技術協力管理法)을 제정하여 대만 민간기업의 대중 투자·기술합작까지도 허용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법제정은 실질적으로 대만이 그동안 고수하여 왔던 「삼불정책」(三不政策)중 「불접촉」(不接觸) 정책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양안간 직접적이면서 실질적인 인적 교류와 경

8) 「文匯報」, 1996. 6. 17.

제 투자 및 기술교류 협력이 다각도, 다변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기술 합작허용 조치는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로 인해 대만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조치였다. 대만정부는 대중 투자이익만 보장된다면 양안의 정치관계 개선속도와는 별개로 대중 투자규제를 풀 수 있는 입장으로 전향한 것이다.

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야

1986년까지 중국의 3통4류 제안에 대하여 대만은 우선 해외에서 중국과의 비공개 학술접촉을 처음으로 허용하였으며, 일부 대만 예술가들은 대만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예술가들과의 문화예술 교류만을 추진하였다.⁹⁾ 1987년부터는 학술, 교육 및 친척방문 교류가 중·대만간 사회·문화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분야의 교류가 점차적으로 빈번해짐에 따라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체육교류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대만이 「삼불정책」(三不政策)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민주화 요구에 맞춰 이미 1987년 말부터 대만 일반인의 중국 본토내의 이산가족 상봉과 친척방문 등을 허용한데 크게 기인하였다.

(1) 양안간 학술 교육 방문 및 친척 방문: 선도적 역할

여러 분야중 중국과 대만이 가장 먼저 교류사업을 시도한 부문은 양안간의 학술회의의 부문이며 이어 이산가족들의 친지방문 및 여행부

9) "Article Reviews Cross-Strait Exchanges," *FBIS-CHI-95-117*, 9 Jun 1995; 「人民日報」, 1995. 6. 9.

문이었다. 대만은 대륙주민의 문명, 문상을 위한 대만방문, 해외거주 본토학자 및 학생들의 대만 방문 등을 허용함으로써 학술, 교육, 친지 방문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교육교류 중 중국학생들의 대만유학 보다는 대만학생들의 중국유학 및 체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 배경에는 양국정부의 우호적 판단이 작용하였다. 우선 북경당국은 젊은 대만학생들이 중국 유학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반공의식이나 대만 독립의식이 많이 감소 또는 불식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만당국으로서는 대만시민의 국내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교육자유화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학생들의 중국유학을 통하여 대만의 민주정치를 더욱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혐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만학생의 중국내 학교 진학에 관한 규정」이 1987년 중국에 의해 공표됨에 따라 1988년부터 소수의 대만학생이 중국의 예술, 의학, 문학 등을 배우기 위해 본토로 유학하기 시작하였다. 대만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의 각 대학은 처음에는 입학시험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여 대만에서의 학업생활에 드는 비용보다 저렴한 여건을 조성하여 중국유학하는 대만학생 수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1989년부터 해외교포(海外僑胞), 해외에서 중국본토로 이주한 중국인(歸僑) 및 그 친척(僑眷)들의 중국내에서의 정치적 결사 및 왕래까지도 수용,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해외교포(대만교포를 포함한)의 수는 더욱 증가되었다.

1990년 대만당국이 중국공산당 요원의 자국방문, 대만공무원의 대륙내 친척방문까지 허용함으로써 중·대만간 민간인, 당원, 공무원들의 친척방문은 사실상 완전히 개방됨으로써 중국인의 대만 불법이민이

문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대만의 대중국 경제교류 과정에서, 대만 경제인이 중국본토에 공장 및 회사설립을 계기로 일정기간 본토에 상주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대만에 있는 가족과는 장기간 별거하게 되어 이들 경제인들의 대륙 여자와의 혼외정사 사건이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자녀들을 데리고 본토의 친척과 조상을 해후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 9월 양안의 적십자사는 우선 불법이민 중국인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는 「金門협정」(金門協定)에 서명하였는 바, 이는 1949년 이래 양안간의 민간기구간에 이뤄진 최초의 협정이었다.

대만의 대중국 직접적인 인적 교류 확대는 1991년 동원감란시기의 종식 선언과 1992년 7월 중국통일시까지 양안 주민들의 교류를 규정하는 「대만지구·대륙지구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의 제정 및 그 해 9월의 발효 등 구체적이고도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이후부터 였다.

한편 1988년 「대만우편물의 전송 반출·입에 관한 규정」과 이어 1989년 「대만기자의 본토취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중국은 「중국민의 대만지역 왕래 관리규정」을 발표하여 대만의 정책 전환에 호응하였다.

중·대만의 인적 교류는 정부간 협상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조치가 상대방의 호혜적인 반응과 조치를 유발하는 형태로 정착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심화된 데에는 정부간협상 보다는 민간 베이스 혹은 경제적 실리에 기초하여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1987년부터 1991년간은 주로 대만인들의 방중이 친척방문, 관광,

혹은 문화, 의료, 학술, 출판 교환관련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1989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본토인이 사회·문화 분야 교환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1989년 6월 중국과학원 소속 지리연구소 한 연구원이 학술교류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였다. 1991년말 대만당국은 약 40여명의 중국본토인의 대만방문을 교환목적으로 허락하였다. 1992년부터 양안간의 교류는 점차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우선 대만 저명인사와 중간레벨의 대만 현직 공무원의 방중이 실현되었으며 중국의 각계의 유명한 전문가, 학자 등이 대만을 교환목적으로 방문하였는데 이에 는 고위 당과 관료도 포함되었다. 한편, 문화·예술단 방문 등이 전체 대만방문 수의 반을 차지하였다.

대만인의 방중은 1989년 54만명에서 1990년에는 약 92만명으로 급증하였으나, 중국인의 대만방문 수는 1990년까지도 약 5300명으로 거의 대만인의 방중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는 본토 중국인들의 대만 방문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만방문의 수가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에서 약 6~7년간 대만인의 방중(친척방문 및 관광 포함) 수는 약 730만명에 달하였으며 1988년에서 1994년간 중국인의 대만 방문자수는 5만명이상이었으며 그 중 7000명 정도가 교환 목적이었다. 이처럼 대만인의 본토방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

(2) 체육교류의 갈등

1986년부터 대만은 국제경기에 중국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의 접촉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은 1988년까지 근 2년간 대만의 참가요청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제경기 참가에 필요한 명칭, 기(旗), 국가(國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대만의 입장

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초하여 대북(臺北)이라는 명칭으로 대만이 참가하기를 원하는 반면, 대만은 「대만, 중국」(臺灣, 中國)의 명칭으로 참가하기를 고수한데 있다.

1989-1990년 기간 올림픽경기 참가문제에 대해 대만이 「중화, 대만」(中華, 臺灣)이라는 명칭과 올림픽위원회의 기계양 방식에 따라 참여할 것을 결정, 중국측에 양보함에 따라 중·대만간 체육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 대만 체육단은 「중화, 대북」이름으로 제11차 아시아올림픽 북경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었으나, 중국이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인해 1998년 아시아올림픽 경기의 대만 주최가 불가능해지고 태국이 대신 개최국이 되었다. 이같이 중국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권한 행사를 용인하지 않고 다만 양안간의 체육교류만을 수용하였다.

2. 1993년 이후

가. 정치관계

양안 정치관계는 1993년에서 1994년간 완화되었다가, 1995년부터 1997년 초까지는 긴장상태를 지속하였다. 중·대만간 첫 공식회담은, 비록 반관반민의 형태를 빌리긴 하였어도, 1993년 4월 제1차 중국의 해협회 - 대만의 해기회의 싱가포르회담(제1차 왕고회담: 汪辜會談)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왕고회담에서 양국의 정부를 대표하는 관리들은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은 물론 회담의 정례화 문제에 관해 논의하

였다. 양국은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된 분쟁처리, 투자보장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회장급 회담은 년1회, 부대표급은 년2회, 실무급은 년4회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중국당국이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분쟁처리문제와 투자보장문제는 향후 차기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중대만은 양기구를 통해 불법 입국, 중국 민간항공기 납치범 송환과 어로분규 등에 관한 문제해결을 논의함으로써 양안간 정치적으로 현안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서 나가는 전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정치적 변수로 인해 양안간의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이 영향을 받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993년 8월 31일 중국이 공표한 「대만문제여중국통일」(臺灣問題與中國統一: The Taiwan Question and the Reunification of China)문서에 대해 대만 당국의 입장을 분석하면 당시 양안간에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만 대륙위원회가 1995년 7월 처음으로 출간한 통일관련 백서에 의하면, 대만은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법과 조약이 갖는 규범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또한 대만주민들의 대만의 장래와 중국통일에 대한 의사와 번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으나, 중국공산당의 중국 대표 합법성을 거론하면서도 중국이 중·대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만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대만의 정치적 비난이 과거에 비해 실리중시 측면을 더욱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양안의 정치관계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¹⁰⁾ 1997년 말까지 긴장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이총통의 방미에 대한

10)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1990년 기구설립이후 1995년 7월 처음으로 양안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중국측의 불만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해협상에서의 무력시위에 기인하였다.

1993년 제1차 회담에서 1995년 7월에 제2차 본회담 개최를 합의하였으나, 1995년 6월 이등휘(李登輝) 대만총통의 미국방문에 대해 중국이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양 기구간 접촉이 단절되었으며 급기야는 1996년 봄 대만해협 상에서의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 감행으로 인해 양안관계는 더욱 긴장되어 1997년 말까지 근 3년간 공식적인 대화 및 접촉이 단절되는 등 양국간 정치관계 회복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대만의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감은 훨씬 증폭되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가 결국은 미국 등 주변 강국의 개입과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996년 말 강택민(江澤民) 당총서기는 당, 군, 정 부문의 책임자들에게 중국의 대만전략과 정책이 다소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면이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그의 연설에 의하면, 첫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중 전략이 중·대만의 완만한 정치적 대화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대만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만 독립’ 정책,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 등에 의해 양안간 정치적 협상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고, 셋째, 대만정부가 정치적 입지 강화와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코자 하여 장기간 동안 평화통일을 위한 중국과의 진지한 협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강택민 총서기는 현재 대만이 지니고 있는 독립된 위상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이등휘 대만정부의 입장을 경계하면서 중국은 대만의 실용외교(pragmatic diplomacy)노력과 대만독립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 노력 등을 저지할 수 있는 건전한 방안이 결핍되어 있

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중국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대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나, 군사적 모험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군사적 해결에 수반되는 정치, 경제적 비용 규모를 고려할 때 과연 국가이익에 부합한 지를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등소평(鄧小平)도 대만문제 해결(통일실현)은 20~30년이상 걸리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서둘러 말아야 할 것과 2010년경 대만이 통일실현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해진 통일원칙과 정책에 의거,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¹¹⁾

이에 따라 1997년 등소평의 사망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긴장 완화 유화 제스처가 표방되었다. 1997년 3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이 통일될 경우, 대만에게 부주석직을 제공하고 대만군은 통일된 후에도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였다. 중국이 통일후 대만군의 활동 및 유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대만측에 언급한 바 있으나, 국내 치안유지 목적이라는 기존의 기능을 '독자적 기능'으로 언급한 것과 부주석직 제공 의사를 표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의 평화공세에 대응하여 대만은 중국의 무력위협 포기를 요구하면서도 대중국 정치대화 재개 가능성을 많이 시사하였다. 이등회 대만 총통은 1997년 5월 1일 대중국 평화협상 재개, 중국방문 의사 표명과 중국의 무력위협 포기를 요구하였다.¹²⁾ 중국은 임양항(林洋港) 국민당 전부주석의 1997. 5. 3~ 5. 19일간의 개인자격의 본토방문을 수용하고 강택민, 해협회 회장 왕도함(王道涵) 등과의 면담을

11) "Title: CHINA: Jiang Zemin Speech on Taiwan Strategy Revealed," *FBIS-CHI-97-009, Cheng Ming*, 1 Dec 96 No. 230, pp 19-20.

12) 「세계일보」, 1997. 5. 2.

주선하였다. 중국이 이등휘 대만총통의 방중에 대한 입장을 표방하지 않은 채, 이처럼 임 전부주석의 방중을 제안한 것은 임 전부주석이 「대만독립」을 강하게 선호하는 대만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장경육(張京育)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회장은 제2차 중국의 해협회 - 대만의 해기회 회담전에 이등휘 대만 총통이 기왕에 고수해 오던 대만의 '3불정책'의 종식을 1997년 5월 1일 발표한 점을 증시하였다. 이는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 되는 시점을 2개월 앞둔 상태에서 나온 대만의 중요한 조치이다. 대만당국은 그동안 대만의 증개항으로서 큰 역할을 해온 홍콩의 중국반환으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이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장위원장은 1979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 이라는 원칙을 중국과 대만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해협회-해기회 1993년 4월 회담에서도 양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각기 나름대로의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서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양안 당국이 많은 현안문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만약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융통성있는 해석이 가능치 않을 경우, 양안관계는 정치적으로 복잡해져서 양안간 발생하는 여러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1997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은 중국의 실질적인 통치 현실을 인정한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를 수정 통과하였는 바, 이 조례는 전중국을 「대만지구」(臺灣地區)와 「본토지구」(本土地區)로 구분하고, 「대만지구」에는 대만(臺灣), 팽호(澎湖), 금문(金門), 마조(馬祖) 만이 속함을 인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대만당국의

주권방어는 단호한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1997년 대만·국방부는 현단계에서 중국이 대만을 향한 대규모 침공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만의 대중 군사전략을 해안상륙을 통한 개입 (beachhead engagement) 전략에서 중국 기동군 타격전략(beatting the invading Chinese mobile forces)으로 변경하였다. 동 전략은 중국의 대대만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향후 중국군의 침공 양상은 중국의 기동군이 대만의 주요 항구와 군사시설을 점령한 다음에 후방의 중국군이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³⁾

중국의 대대만 유화제스처는 1997년 11월 말 양안간의 적대감을 종식하기 위한 대만과의 정치관련 대화와 직교역과 인사교환 촉구에서 비롯된다.¹⁴⁾ 이는 중국이 향후 개최될 협상에 있어 양안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만과의 정치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인정한 데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1998년 2월 24일 중국의 반(半)관영 대만 담당 최고기구인 해협회가 대만측 협상 파트너인 해기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양안 정치협상 재개를 가능케 하였다.¹⁵⁾ 해협회는 이 서한에서 정치협상이 양안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신들은 대만측 해기회와 정치협상 절차문제를 논의할 용

13) 중국은 2005~2010년 경에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이었으나, 2000년에 항공모함 보유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1996년 3월에 있었던 대만해협상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시위시 두척의 미항공모함 무력시위 능력을 평가한 중국이 미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건조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있다. "HONG KONG: Jiang Zemin Said To Want 1st Aircraft Carrier by 2000," *FBIS-CHI-97-003*.

14) China: Spokesman: PRC Wants To Speed Up Talks With Taiwan, *FBIS-CHI-97-322*, Hong Kong, AFP, 18 Nov 97; 중국의 대만과의 정치협상 재개 촉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China: Taiwan's Attitude on Cross-Strait Talks," *FBIS-CHI-97-350*, 16 Dec 1997; 「文匯報」, 1997. 12. 12. 참조.

15) 「新華통신」, 1998. 2. 24.

의가 있으며 그런 후에야 경제문제 및 통상적인 문제에 관한 회담의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협회는 또 정치협상에 앞서 해기회측 인사들과의 교류 및 접촉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해기회 감진보 회장이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회장의 방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만장(蕭萬長) 대만 행정원장은 “해기회가 즉각 정치협상 준비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중국측의 대대만 정치 협상 촉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¹⁶⁾

대만이 중국의 정치협상 재개 촉구를 수용한 데 이어 1998년 6월 중국은 전국대만공작회의에서 「확대교류, 공의통일, 반대분열, 증가요해, 발전합작」(擴大交流, 共議統一, 反對分裂, 增加了解, 發展合作)이라는 「이십자방침」(二拾字方針)을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는 1998년 7월 제2차 중국 해협회 회장·대만 해기회 이사장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십자방침」이라는 것은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정치인, 군인, 관리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원하는 대만의 정치세력이 국민당 혹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든지 간에 상대가 누구이든 통일협의를 할 수 있으며, 상호간 반목을 반대하며 이해를 증진하여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¹⁷⁾ 이처럼 중국이 대만보다 더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호전됨에 따라¹⁸⁾ 양안

16) <北京=연합>「세계일보」, 1998. 2. 24.

17) 「문화일보」, 1998. 6. 8.

18) 클린턴 미대통령은 미중 북경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지 않을 것임을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언급하였으며 또한 1998년 6월 30일 클린턴의 상해 방문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 독립’이나 ‘두 개의 중국’ 혹은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라는 개념, 국가주의가 요구되는 국제기구에의 대만가입을 지지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China Times*, (Taipei), June 30, 1998.

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더불어 97년 중반기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한 아시아 금융위기에 중국이 대처하기 위해 대만과의 경제협력이 보다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양안간의 정치적 관계가 긴장에서 완화상태에 돌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의 통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만 전략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 반환 문제는 대만과의 통일실현의 첫 단계이며, 둘째, 평화통일을 위해 양안간의 경제협력 증진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며, 셋째,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음은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성을 지속함으로써 대만독립 기도를 좌절시키며, 넷째, ‘하나의 중국’ 원칙아래 대만의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불간섭하지만 대만과 국제사회의 교류를 최대한 봉쇄함으로써 대만의 소위 ‘실리외교’ 혹은 ‘휴가의외교(vacation diplomacy)’를 억제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이러한 기본전략은 중국이 아직까지 양안관계 설정을 홍콩, 마카오 방식과 같은 「일국양제」 방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일국양구」 방안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나. 경제 교류·협력 분야

대만당국은 1993년 대만의 대륙투자 및 기술합작을 허가하는 「대

19) "PRC: Tokyo Journal on Taiwan Strait Political Dynamics," *FBIS-CHI-96-096*, 8 May 1996, Tokyo *SAPIO*, 8 May 96; pp. 90- 91.

20)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이케다 유키히코(地田行彦)일본외상에게 언급한 내용임. 「세계일보」, 1997. 3. 31.

륙투자기술합작허가법」(大陸投資技術合作許可法)을 제정하여 허용 기준을 크게 3업종 별로 구분 - 투자허용 업종(positive list), 투자금지 업종(negative list),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사안별 심사 - 하여 허가하였다.²¹⁾ 이에 호응하듯 중국은 1994년 「대만동포투자보호법」(臺灣同胞投資保護法)을 제정하여 중·대만간 투자 및 기술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중국의 해외교포의 투자유지 전략은 1994년 6월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장정」(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章程) 통과, 340명의 고문단과 206명의 명예위원제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1994년 당시 중국내 해외교포가 보유한 기업수는 26,000 여개에 달하는 등 교포들의 대중 경제교류, 투자 및 합작사업이 심화되었으며 그 중 대만동포의 대중 투자사업 규모는 홍콩 다음으로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1997년 7월 대만당국은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산 제품 4천여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의 금지된 품목 명단에 있지 않는 모든 제품은 제3국을 통해 수입될 수 있도록 하여 대중 수입정책을 수입허가제에서 최소 수입금지제로 전환하였다.²²⁾ 수입금지 품목의 해제는 중국의 대만수출을 촉진시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역적자가 어느 정도 완화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만의 대중 수입금지 품목의 상당수가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품목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만의 대중국 조치에 대해 1993년 2월 취임이후 4년반 동안

21) 대만은 1992년에는 대중 투자종목을 158개로 확대하고, 1993년에는 787종목을, 1994년에는 220개의 종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확대 방침은 1996년에 컴퓨터 관련 품목을 포함한 451개의 제조업, 증권, 선물거래, 유통업 등을 망라한 품목들을 허용 함으로써 사실상 여러 분야에 걸쳐 대중 투자품목을 거의 확정된 것이다.

22) *South China Morning Post*, 1997. 7.

부총통과 행정원장을 계속 역임하고 있는 연전(連戰) 대만 부총통 겸 행정원장은 1997년 8월 양안관계가 기본적으로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안간 경제교류와 무역활동에 끼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은 중·대만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바로 대만의 국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²³⁾

양안간 직항문제와 관련, 대만은 1995년 5월 중국과 직접항행을 허용하는 자유항구를 운영하여 외국선적 및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중국까지의 직접 항행을 가능케 하였다. 대만이 중국 선적의 모든 화물선이 제3국을 거쳐 대만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대만의 고웅(高雄)항, 중국의 복주(福州)항 및 하문(廈門)항을 오가는 중국의 6개 선박회사 및 대만의 6개 선박회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양안간 해상연결이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 대만은 또한 1996년 5월 양안특구를 설치키로 하는 「양안경제무역교류특구설치관리조례」(兩岸經濟貿易交流特區設置管理條例) 법안을 마련하여 대만의 대중(臺中)항과 고웅(高雄)항 인근에 특구를 설치하고 특구내에서 양안간 인적, 선박, 항공기, 기술, 자본, 정보, 우편, 통신 등이 정치적 제약없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양안간의 화물 운송 비용의 약 40%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²⁴⁾

그러나 북경당국은 대만의 조치에 대해 크게 만족치 않았다. 이는 대만이 자신의 선박은 중국본토에 입항,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 대만의 항구를 중개선적(transit shipping center)중심지로 활용케 한 반면, 중국선박에 대해서는 대만해역 밖에서만 정박케 하고 대만당국의 통제와 제한을 받게 하였기 때문

23) 連戰 행정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經濟時報」(臺北), 1997. 8. 9., pp. 3-4.

24) *China Business Review*, 1997. p. 21.

이었다.²⁵⁾

대만의 특구설립 조치에 대해 중국은 만족치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신속히 대응하였다. 1996년 8월 하문항이 있는 하문경제특구에 대만과의 무역을 위한 특수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었으며 「대만해협양안간항운관리규정」(臺灣海峽兩岸間航運管理規定)과 「대만해협양안간화물운수관리규정」(臺灣海峽兩岸間貨物運輸管理規定)이 제정되어 복주(福州)와 하문(廈門)항이 최초의 대만과의 직항 항구로 지정되었다. 이 같이 중·대만은 특구설치와 조례를 서로 제정함으로써 양안간의 경협 및 교류를 확대시켜 온 것이다.

1997년 4월 「통항」(通航: 중·대만간 직접 운항)이 대만기를 게양한 중국선이 중국의 하문항을 출발하여 대만의 고웅항에 입항함으로써 중국 선박의 직항이 48년만에 처음으로 실현되었다.²⁶⁾ 양안간 직접 선박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대만의 1997년 1월 중국선박의 입항 허가 조치에 대해, 중국이 1997년 4월 대만선박의 중국입항을 호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양안의 항구에 중·대만의 선박들이 상호 입항할 수 있었으며, 둘째,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즉 중국선이 대만항에 입항할 중국선박의 대만 국기의 게양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직항을 통한 양안의 경협으로 그간 지속되어 왔던 대만의 정치적 실체 불인정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대만 당국 역시 홍콩의 중국반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직항을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대만에 있어서의 홍콩의 중요성은 대만과 홍콩간의 교역 및 투자규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표1. 참조)

25) "PRC: Taiwan's Attitude Toward '3 Links' Viewed," *FBIS-CHI-96-127*, 23 May 1996; 「文匯報」, 1996. 5. 23.

26) 「明報」, 1997. 4. 25.

〈표 1〉 대만의 대중 간접교역규모(홍콩경유)

단위: 억 달러, %

	대만의 대홍콩 수출		대만의 대홍콩 수입		대홍콩교역총액액	
	금액	그중 대중수출 액	금액	그중 대중수입 액	금액	간접교역 금액
1981	19.2	3.8	4.3	0.7	23.5	4.6
1985	26.7	9.8	5.5	1.1	32.3	11.0
1990	74.4	32.7	27.2	7.6	101.7	40.4
1991	95.6	46.6	31.7	11.2	127.3	57.9
1992	113.0	62.8	33.9	11.1	146.9	74.0
1993	122.0	75.8	36.5	11.0	158.6	86.9
1994	139.3	95.1	37.0	12.9	176.3	108.1
1995	165.7	98.8	45.8	15.7	211.5	114.6
1996	157.9	97.1	42.7	15.8	200.7	113.0
연평균 증가율	15.1	24.0	16.5	22.5	15.4	23.8

자료: 行政院大陸委員會, 「兩岸經濟統計月報」, 각호

대만과 홍콩간의 교역액은 1996년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이는 대만의 당해연도 총수출액 1159억 달러의 약 16.6%에 달하는 것이다.²⁷⁾ 이로써 대만은 홍콩의 4대 교역국, 3대 수입국, 7대 수출국이며 이 중 56%인 114억 달러는 중국과 대만간의 재수출인데 매년 약 24%의 증가를 보여 대만-홍콩간의 전체무역 증가율 15%를 상회하였다. 1997년 경우, 중국과 무역하는 대만기업 가운데 약 38%가 홍콩을 통해 거래 주문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 정도가 홍콩에서 중개무역을, 대만기업의 20%는 홍콩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

27) 「中華民國臺灣地區進出區貿易統計月報」, 1997. 12.

다.²⁸⁾ 이처럼 1997년의 중·대만의 홍콩경유 교역이 증가한 것은 중국이 제15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안정과 홍콩의 성공적인 중국반환 등을 기치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많이 제고시켰기 때문이다. 1997년 홍콩을 통한 중·대만 증개 무역액은 24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중국·홍콩·대만간 무역액은 330억 달러 규모이었으며, 대만이 무역흑자를 경험하였다.²⁹⁾

대만의 대중 투자와 관련, 대만의 통계에 의하면, 1993년 경우 32억달러로 1992년에 비해 15배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94년 경우 약 1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다(표2.참조). 1995년 경우 약 11억달러 규모로 1994년에 비해 6.8%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1994년 초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8조항 선언(8-point statement)에서 양안관계의 발전을 언급하였음에도 1994년 후반기 양안관계가 긴장됨에 따라 대만의 대중 투자액과 무역 교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데 기인한다. 1993년이후 중·대만간 경험의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993~1994년 경우처럼 양안간 투자 및 교역이 양안의 정치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15개조항 역시 이들 조항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당시 대만기업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³⁰⁾

<표 2> 兩岸經濟交流 推移

28) 김원태, “중화경제권의 팽창: 홍콩반환,” 「삼성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29) 「人民日報」, 1997. 12. 19.

30) “Taiwan: Interview With PRC Official on Exchanges,” *FBIS-CHI-96-107*, 29 May 1996, 「中國新報」(대만), 1996. 5. 29. Wang Hui(중국대외경제무역협력부 산하 대만, 홍콩, 마카오 사무 부처장과의 인터뷰).

	대만의 대중 무역액			대만의 대중 투자액		
	수출	수입	총액	대만통계	중국통계	비중
1991	74.9	11.2	86.1	1.74	4.72	10.8
1992	105.4	11.1	116.6	2.47	10.53	9.6
1993	139.9	11.0	150.9	31.68	31.39	11.41
1994	160.2	15.5	178.8	9.62	33.91	10.0
1995	194.3	30.9	225.2	10.92	31.65	8.4
1996	207.2	30.6	237.8	12.29	34.75	8.2
91~96	882.1	110.5	995.7	68.73	149.02	80.4

단위 : 억달러, %

주: 대만의 대중투자액 중 대만통계는 정부의 허가금액, 중국통계는 실행액 기준
 자료: 行政院大陸委員會, 「兩岸經濟統計月報(各年號)」, 中國對外經濟貿易合作部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各年號)」

대만의 대중 무역과 관련, 1992년 무역총액은 117억 달러에서 1993년 15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1994년에는 17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225억달러로, 1996년에는 238억 달러에서 1997년 약 244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되고 대만의 대중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1996년 대만해협상에서 양안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경제 교류·협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 것은 중국과 대만이 양안간 경제교류와 협력은 중단되서는 않된다는 기본인식과 양안간 경제인들의 활동이 정치적 긴장을 크게 고려치 않은 데도 그 이유가 있다. 중국은 1997년 165억 달러의 대대만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대만과의 교류를 지속한 것이다.

대만의 해외 투자 중 대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1년

9.5%, 1992년 21.7%, 1993년 65.6%, 1994년 37.3%, 1995년 44.6%, 1996년 34.0%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평균적으로 대만의 전체 해외 투자의 약 36% 가량이 중국에 투자되었다.³¹⁾ <표 3>에 의하면 1996년 말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대만정부 승인기준으로 약 69억 달러, 중국측 계약기준으로 349억 달러에 달할 정도이며 실행액 기준으로 대중 투자는 1991년~1996년 말 현재 149억 달러로 전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액의 8.4%를 점해 홍콩의 대중 투자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였다.<표3.참조>.³²⁾ 대만기업의 업종별 대중 투자는 제조업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전자, 전기(16.9%), 고무, 플라스틱 음식료, 기초금속 순으로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 대중의 대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건

	대만정부 승인기준		중국정부 통계기준	
	건수	허가액	계약액	실행액
1991	237	1.7	13.9	4.7
1992	264	2.5	55.4	10.5
1993	9329	31.7	99.7	31.4
1994	934	9.6	51.7	33.9
1995	490	10.9	58.4	31.6
1996	383	12.2	64.8	34.8
합계	11.637	68.6	348.7	149.1

자료: 「中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1997. 12 및 「中國統計年鑑」, 1997

31) 「中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1997.

32) 「中華民國臺灣地區進出區貿易統計月報」, 1997. 12.

그러나, 이등회 총통의 방미와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양안관계가 소원해져 빠른 시일내에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만당국은 대만경제의 지나친 대륙투자가 만에 하나 중국 주도로 통일이 실현될 경우에 대만기업의 막대한 손실 초래 및 대중 경제력 의존을 우려, 자국기업의 대중 투자규모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5월 대만은 대만기업의 대륙 투자한도액을 업체당 3천만 달러, 투자 한 건당 5천만 달러로 상한선을 정하였으며, 특히 댐, 발전소, 공항, 도로, 항만 등 투자규모가 큰 인프라 건설을 금지하였으며, 양안간 총교역량이 대외교역량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일부의 대만기업인과 중국측의 불만을 자아내었다.³³⁾ 이에 대해 장경육(張京育) 대만 대륙위원회 회장은 1997년 9월 현재 대만의 대중 투자건 수는 21000건으로 약 120억 달러 규모이며 지난 5년간 대만의 전체 해외 투자액의 43%가 중국에 투자되었음을 밝히고 대만당국은 대만기업이 대중 투자와 교역에 있어 보다 신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만 전체기업의 약 10% 정도가 기업 자율에 의한 대중 투자 손실 책임이 기업가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대만정부의 대중 투자 억제 노력을 반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만기업은 대만정부의 1997년 12월 까지 양안간 직항을 허용하지 않았던 조치에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³⁴⁾

향후 대만의 대중 투자 규제조치가 해소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만당국이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시(1997. 10)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

33) *FBIS-CHI-97-301*, 28 Oct 97, 「大公報」, 1997. 10. 25.

34) "Taiwan: Investors in PRC Warned Against Political, Economic Risks," *FBIS-CHI-97-343*, 9 Dec 1997.

급된 미국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표명이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표방한 것에, 미국이 대만의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며, 둘째, 중국이 대만의 주권과 자주권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만의 지위와 활동을 허용 또는 묵인하지 않는 한, 양안간 정치적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대만이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야

1993년 양안간 문학과 예술 교류가 전체 사회·문화 교류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문학과 예술교환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방문자수의 절반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교육, 체육, 사회과학, 영화, 과학기술, 텔레비전, 건강관련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진됨에 따라 언론, 출판, 종교, 관광, 민속신앙, 금융, 세제, 항공, 핵에너지, 법률 분야 등의 교류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마냥 증가된 것은 아니었다. 1994년 초 대만당국의 대만 공무원의 訪中과 중국 공무원의 대만 방문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음에도 3월말에서 4월초에 발생한 천도호(千島湖) 사건³⁵⁾을 계기로 대만당국이 양안의 사회·문화 교류 등에 대한 대만 정부의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많은 교류와 협력사안들이 연기되거나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대만의 연기 또는 중지 조치에 대해 중국은 천도호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후 양안관계 안정과 현상유지를 위해서도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부문제의 일부로 다루되 대만과의 협상방식만은 마치 외교관계가 있

35) 1994년 3월 31일 關黎宏 등 3명이 浙江省 千島湖에서 중국행 유람선에 탄 수십명의 대만여행객을 살인한 방화사건을 지칭함.

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만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다.³⁶⁾

그 결과 1994년에는 1993년 보다 조금 많은 중국측이 제안한 548건의 교류안이 실현되어 약 3190여명이 대만을 방문하였다. 21명의 고웅시(高雄市) 공무원이 고웅시발전연구대표단(高雄市發展代表團) 이름으로 방중하여 중국을 현지 답사하였으며 주광주(朱光周: 중국과 학원 원장, 당중앙위원), 혜광(慧廣: 전인대 상임위 위원, 전 농업부장관) 등의 고위인사의 대만 방문은 양안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반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대륙인의 대만 방문은 대만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 중국의 유명한 예술가의 기념비적 미술전시회, 세계적인 중국 탁구선수의 대만탁구대회 참가, 중국지방 민속오페라단과 내몽고 민속예술단의 방문 등은 대만 사회, 문화, 예술계에 그리고 중국 사회, 문화, 예술계에 대한 좋은 인식과 반응을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1993년이후 사회·문화 교류는 경제교류의 심화에 따라 증대되었다. 1994년 경우, 대만의 중국 방문자는 660만명인 반면, 중국의 대만 방문자 수는 78,000명에 머물렀으나, 1997년까지 대만인 일천만명이, 중국인 22만명이 상호 방문할 정도로 인적왕래가 증폭되었다.

1996년의 경우, 양안간 정치관계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875건의 교환사업은 1995년 대비 약 19%까지 증가되었다. 자세히 언급하면, 1996년 4월 대만고등학교 남자배구팀과 여자 농구팀이 심양(瀋陽), 북경(北京), 서안(西安) 등지에서 친선경기를 가진 바 있었으며, 중국인민대학과 북경사범대학은

36) 『聯合報』, 1994. 7. 24; "PRC Reportedly To Readjust Taiwan Policy," *FBIS-CHI-94-154*, 24 Jul 1994.

각각 64명의 대만 선생,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표단들과 교류하였다. 이는 중·대만이 양안간 정치관계 소원에도 경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만간 인적교류를 억제하지 않은 데 크게 기인하였다.

교육교류와 관련해서는 1991년~1995년 경우, 대만학생의 중국 고등 교육기관 등록자 수는 1288명이었으며, 중국의 8개 부처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만, 홍콩, 마카오 주재 학생들의 중국유학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마련하여 이들의 중국유학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특히 중국은 자국주재 대만, 마카오, 홍콩학생들을 중국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히 취급하였으며 장학금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양안간 학생들의 교류로 특히 학술, 과학, 기술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이 크게 증대되었다. 주로 중국 민속문화의 증진 방향, 중국 근대화 활성화 방안 등의 토론과 연구 주제로 양안 지식층간에 서로의 이해가 도모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관련 세미나도 실현성있게 많이 개최되었으며 중국 의학자가 대만을 방문하여 수술에 관한 연구발표도 있었으며, 핵의학 계통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 해양, 천문학, 가무단, 예술단 등의 상호방문을 통한 연구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³⁷⁾

이처럼 대만인과 중국본토인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한 또 다른 이

37) "CHINA: Review of Cultural Exchanges With Taiwan," *FBIS-CHI-97-021*, 28 Dec 1996; 「人民日報」(해외판), 1996. 12. 28. p. 5.

유는 대만 및 본토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상호 방문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점과 대만기업의 본토인 고용을 위한 일부 본토인들의 대만내에서의 체류와 거주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18일 대만입법원은 양안 주민들의 왕래 및 체류 등에 대한 조례인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 등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인하여 이전에는 본토인(중국대륙인)의 대대만 투자가 3개월간의 월급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체류 불가였던 것이 월급충당과 관계없이 대만기업이 중국본토인을 대만내에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러나, 대만인이 본토인의 대륙운송 외에는 다른 장소로의 운송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본토인의 제3국으로의 이동을 금지시켰다.

대만 입법원은 행정원이 차후 대만인의 본토배우자를 우선적으로 데려오는 조치를 요구하고, 본토인 중 대만인의 직계혈통과 배우자, 그리고 12세이하, 70세이상과 대만군인의 적(籍)을 가진 사례가 있는 자들의 대만거주를 허용하였다. 수정안은 또한 본토에 있는 대만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미성년자도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3월 천도호 살인 방화사건이후 대만의 대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적이 있으나, 대륙의 치안상태가 나아짐에 따라 대륙방문 수가 확대되었다. 그 한 예로 대만인의 절강성 방문통계를 들면, 1997년 까지 대만인의 절강성(浙江省) 방문자 수는 190만명이며 절강성 주민의 대만방문자 수는 9,000명에 달하였는 바, 이는 2,000개의 대만기업의 창업과 50억달러의 투자(대만의 중국내 어느 지방보다도 가장 많은 규모임)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와 협력은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³⁸⁾

IV. 결론: 중·대만 사례가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1. 중·대만 교류·협력의 특징

가. 중국의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과 대만의 「실리위주」(實利爲主) 전략

중·대만은 평화통일원칙에 동의하고 있으나, 양국의 통일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접근 전략을 보여 왔다.

중국은 대만과의 경협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추진하나, 대만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협상은 반대하고 이를 대만이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문은 다음에 합의함으로써 실리를 취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대만의 정책보다는 큰 신축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중국의 신축성은 대만기업의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인정, 이를 위한 법적 조치 및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치적 불일치로 인한 양안간의 비정치 분야의 협력증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노력한데 기인한다. 특히 중국은 1997년 대만 해협상에서의 대대만 무력시위이후 대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유화 정책을 취하여 실리적인 측면

38) "China: Zhejiang TV To Air Program on Cross-Strait Ties," *FBIS-CHI-98-026*, 26 Jan 1998.

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 대만은 중국과의 직교역을 불허하면서도 제3국을 통한 중국과의 간접교역을 수용하고 특히 홍콩을 경유한 무역을 적극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이 상호 공통된 입장을 취할수 있었던 것은 양국 자원, 상품, 기술에 있어 강한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나. 중국의 「이민뱌관」(以民遍官)과 대만의 「이관뱌민」(以官遍民) 전술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규모와 금액의 확대를 위해 대만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만기업의 대중 경제이익 추구를 부추키는 「이민뱌관」(以民遍官) 전술을 구사하였다. 중국은 특히 대만상업계, 항공, 선박업계 등을 겨냥, 이들 업체들의 본토투자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해협항운관리법」(海峽航運管理法)을 공포함으로써 대만당국의 저지 노력을 견제하였다. 반면 대만은 정부주도로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액의 상한선과 업체별 투자 한도를 정하는 등 대만기업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중국의 압력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다. 중·대만의 일방적 정책완화 조치

양안교역과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실현은 중국 또는 대만의 일방적인 정책완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대만기업의 교류와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또는 대만의 일방적인 완화조치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여러 조치가 지

속됨에 따라 기업인들과 양안의 당국자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양안간의 경험추진은 정부간 협상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조치가 상대방의 호혜적인 반응과 조치를 유발하는 형태로 정착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심화된 데에는 정부간 협상 보다는 민간베이스 혹은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양안간 경험상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와 조정을 맡은 해기회와 해협회는 법적인 면에서는 민간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정부 기구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 정치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지만 비정치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상호 인정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비슷한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확대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해기회-해협회의 회담에서 어업분쟁, 범죄타파, 대만기업인의 중국내에서의 보호, 대만관광객의 신변보호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 등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비정치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즉 중국은 중국경제 증진을 위해 대만정부가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체라는 점을 인정,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만이 교환과 협상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킨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주민을 대륙인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양안간 민사법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데 반해

대만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안 주민간에 발생하는 분규를 해결하려는 점은 다르다.

2.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

가. 경제 교류·협력 분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에서 통일실현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만에 대해 과감한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특히 경제교류를 심화시켜 왔다. 이로써 중국과 대만의 경제력은 홍콩경제권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투자 및 교역 여건이 형성되었다. 중·대만 경제 교류·협력 사례는 통일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한국이 먼저 주도적이면서 호혜적인 대북 경제 교류 협력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우선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와 민간기업의 자원에 의한 대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대북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의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활성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한국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상응한 북한의 조치를 요구하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의 적극적 입장표명이 있어도 당분간 북한당국의 입장이 크게 개방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의지와 속도는 중국에 비해 너무나 떨어져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동기를 유발을 매우 저하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내수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한국정부나 북한 당국의 교역이나 투자에 대한 보증이 없는 경우, 한국기

업의 대규모 대북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감안,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간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여 향후 몇 년간은 남북한간 공식협상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민간 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북한당국의 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류하면서 협상한다는 기본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중·대만간의 경제교류가 촉진된 데에는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호 보완성으로는 양안간의 경제발전 및 상대비용의 현격한 차이, 중국 내수시장의 급신장, 중국의 선진자본 도입의 적극성,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 정책의 적극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도 북한과의 비정치분야 교류에 있어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만이 중국과의 직교역 불허라는 자국의 공식 입장을 우회할 수 있었던 중개지로서 홍콩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중국의 개방과 개혁의지 없이는 대만기업의 대중 진출은 어려운 것이었으며 특히 홍콩과의 교역이 없이는 양안간의 교역과 투자규모는 크게 확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홍콩과 같은 경제교류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보, 자본, 인적 네트워크, 금융기지, 시장경제와 경영기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개지가 없다. 이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 이질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경제적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함을 의미한다. 차치하면 남북한간의 경제마찰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경제활동 자체를 억제하는 소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유입과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가능토록한 북한의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홍콩, 마카오 지역 화교들이 중·대만간 교역과 투자 협력 등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양안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 한국의 교민들이 중개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의 경제교류는 중국의 대외개방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출발하여 이미 10여년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나, 남북한은 이제 겨우 경제교류를 시작하였을 뿐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우선 비정치 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북한경제를 구조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차후 남북한간의 협상을 통한 경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야

중·대만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육, 경협, 교육, 관광, 친척방문 등 종류에 따라 다각적이고 다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대만간 정부차원의 단일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마비되더라도 민간차원의 교류가 지속됨으로써 양안관계의 최악의 상태, 즉 전면 중단 상태를 피할 수 있었다. 즉 정치관계가 소원되면 될수록 사회, 문화 부문의 교류와 협력은 실무차원의 협상으로 중국과 대만이 서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 주었다. 한국 역시 사회 문화 부문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호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은 사회 문화부문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무엇보다도 양안 주민간의 상호 방문을 통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 왔으며 중국 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고유의 문화의식을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대만은 관광, 교육, 과학 기술, 예

술, 여러 방면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케 하였다. 이 점을 감안, 한국은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여러 방면의 교류에 있어 북한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비록 남북한 정치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냉각된 상황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 학자나 학생간의 학술교류, 남북한 예술가와 예술단의 상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견의 폭을 좁혀나감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필요한 부분을 심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中華民國臺灣地區進出區貿易統計月報」, 1997.

「中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1997.

「兩岸經濟統計月報(各年號)」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各年號)」

2. 논문

김원태. “중화경제권의 팽창: 홍콩반환.” 「삼성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Yueh Shan. "Jiang Zemin Concedes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aiwan -- Also Pledges To Resolve Reunification Issue by 2010." *Cheng Ming*(Hong Kong), 1 Dec 96.

3. FBIS-CHI 자료

“White Paper on Cross-Straits Relations.” *FBIS-CHI-94-132*, 6 Jul 1994.

“PRC Reportedly To Readjust Taiwan Policy.” *FBIS-CHI-94-154*, 24 Jul 1994.

“Article Reviews Cross-Strait Exchanges.” *FBIS-CHI-95-117*, 9 Jun 1995.

“PRC: Four Complexes in Cross-Strait Relations.” *FBIS-CHI-96-079*, 20 Apr 1996.

- 'PRC: Tokyo Journal on Taiwan Strait Political Dynamics."
FBIS-CHI-96-096, 8 May 1996.
- 'Taiwan: Interview With PRC Official on Exchanges."
FBIS-CHI-96-107, 29 May 1996.
- 'PRC: Taiwan's Attitude Toward '3 Links' Viewed."
FBIS-CHI-96-127, 23 May 1996.
- 'CHINA: Shen Guofang Discusses PRC Diplomacy in 1996, 1997."
FBIS-CHI-96-252, 29 Dec 1996.
- 'HONG KONG: Jiang Zemin Said To Want 1st Aircraft Carrier
by 2000." *FBIS-CHI-97-003*.
- 'Title: CHINA: Jiang Zemin Speech on Taiwan Strategy
Revealed." *FBIS-CHI-97-009*.
- 'China: Jiang Zemin Speech on Taiwan Strategy Revealed."
FBIS-CHI-97-009.
- 'CHINA: Review of Cultural Exchanges With Taiwan."
FBIS-CHI-97-021, 28 Dec 1996.
- China: Spokesman: PRC Wants To Speed Up Talks With
Taiwan." *FBIS-CHI-97-322*.
- Taiwan: Investors in PRC Warned Against Political, Economic
Risks." *FBIS-CHI-97-343*, 9 Dec 1997.
- China: Taiwan's Attitude on Cross-Strait Talks."
FBIS-CHI-97-350.
- Taiwan: Lien Chan on Cross-Strait Relations." *FBIS-CHI-98-060*,
1 Mar 1998.
- China: Zhejiang TV To Air Program on Cross-Strait Ties."
FBIS-CHI-98-026, 26 Jan 1998.

4. 기타

「經濟時報」(臺北).

「大公報」.

「明報」.

「文匯報」.

「新華통신」.

「聯合報」(대만).

「人民日報」.

「中國新報」(대만).

「문화일보」.

「세계일보」.

China Business Review.

China Times(Taipei).

Cheng Ming.

Hong Kong.

South China Morning Post.

Tokyo SAPIO.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6,0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발간예정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발간예정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흙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